

■ ‘쌀 직불금 國調’ 쟁점과 전망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파동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감사 은폐 배경·명단 공개’ 초미의 관심

◇최대 쟁점=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파동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한 전·현 정권의 연관 문제다.

전격 국조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당시 감사원이 직불금 감사를 진행하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위와 그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개입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지난해 7월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한 달 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어떤 논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지 배후를 우선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직불금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문제로 쌀 직불금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현 정권 인사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이 전 차관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한나라당 김성희, 김학용, 임동규 의원 직불금 수령 문제가 우선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불금 감사 결과가 이미 인수위 시절 보고됐는데도 현 정권에서 아직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추궁하며 현 정권의 책임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지

난 ‘최고기 국정조사’에 이어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조사가 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태에 대한 실체와 책임론을 규명하겠다고며 전·현 정부를 겨누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조가 참여정부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 ‘실물론’을 놓고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전락했던 ‘최고기 국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선부론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조 특위가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증인 채택과 조사기관 선정 문제를 시작으로 신·구 정권 책임론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정치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제2의 최고기 국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국조가 정쟁 수준을 넘어 실제 규명에 접근하느냐 여부는 ‘쌀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말 안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직불금 수령실태의 1차 전수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망을 낙관하기만은 힘들어 보인다.

이처럼 곳곳에 암초가 드러내지면서 국조 특위가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종착역까지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野 서로 “네 탓” 정치공방 가능성

증인 채택 등 핵심 쟁점 싸고 시각차

“부당 수령 쌀 직불금 모두 환수”

“현 상황 IMF 때보다 심각...혈세 지원 은행, 고임금 안돼”

李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는 즉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기회에 사교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등분단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라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선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풀일 부분은 풀이 되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기회에 사교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등분단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라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선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풀일 부분은 풀이 되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막겠다”

민주 서갑원 의원 “대폭 수정해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대폭적 보완’을 전제로 강력한 제동을 걸 전망이다.

21일 민주당 수석원내대표인 서갑원 의원(순천)은 “정부가 지역발전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폭적인 내용 수정 없이는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은 호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역발전특별법의 내용 수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회동, 지역발전특별법의 내용 수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공동 대응을 나설 계획”이라며 “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타 야당과의 공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제출해달라”

최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향의 방문,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부당 수령자 명단의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조배숙, 김영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직불금 은폐, 터무니 없는 모략” 盧 전 대통령측 공식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21일 쌀 직불금 사태에 대한 참여정부의 은폐 의혹과 관련, “터무니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일부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봉하마을측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은폐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며 “문제의 명단은 땅 부자들의 명단인데 당시 청와대가 땅부자 명단을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명단이 공개됐다면 한나라당과 여권 사람들이 가운데 더 곤란한 사람들이 많았겠느냐”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 경위와 관련, “그 부분은 감사원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지금 보증안 처리’ 전격 합의

3당 정책위의장 “실물경제 위기 방지 안돼” 공감대

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자구노력과 자본의 담보를 전제로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선진과 창조당의 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어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동의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기획재정부 심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국내은행이 내년 6월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외화차입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하고 총 보증규모를 1천억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국가보증 동의안’의 조속 처리 외에 ▲은행권의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노력 및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 마련과 국회 보고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에 따라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상황의 추이를 충분히 감안, 논의토록 하는 등 총 5개항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은행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은행의 주식을 강제로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밖에 여야는 ‘국가보증 동의안’ 중 추후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세 인하’를 적극 논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기로 했다.

회담에서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각료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임태희 의원은 ‘국가보증 동의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내일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경제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장 영궁 동행 영궁인 나주와의 만남

- 국내의 쌀을 100%를 전수한 동행
- 저온 및 공백전 : 저온(15도), 공백(30도)전시
- 무충균 : 한국 무충균(무충) 전수
- 제1급 : 최 1급 쌀 백미의 직할 제정 쌀